

구조 개혁으로 성장 엔진 재점화

단 상



박근혜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회복'을 내세우며 재정을 마중물로 경기를 살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그동안의 건정제를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을 견인할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단순한 '확장적 재정'이 아닌 '전략적 재정'을 운용하고 강조하며, 2026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 예산 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8.1%)이나 늘린 728조원을 예산을 쏟아붓는 역대급 확장 재정 드라이브를 강력히 전 가운

앞서 서울시지정구공민이재명협회 회장 데 가파른 나뭇잎 증가로 인한 '부채 우유증'을 우려하는 '주의 경고'를 이 갈수록 커지고 '적색 경고등'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문제는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2%, 국가채무액 규모가 673조원, 정부부채 1212조원, 기업부채 약 2861조원, 가계부채는 약 290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채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물론 올해 1분기는 전 윤석열 정부의 집권기로서 이재명 정부 탓으로 부당 지우려는 건 아니지만 새 정부가 해결할 문제이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이치 낮은 수준이다. BIS 통계에 포함된 OECD 회원 28개국 중 18위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국가채무 차이가 컸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지난 8월29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확장 재정으로 인한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는 약 590조원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 부채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직접 갖아야 할 국가 채무는 올해 약 1302조원에 2029년 약 178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올해 49.1%에서 2029년 58.0%로 추계됐다. 미국발(發) 관세 쇼크로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경상수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재정수지 악화까지 겹치면 '내외 신인도' 저하는 물론 경제 리스크(Risk)만 키우게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기축통화국의 국가 부채 상환선으로 여겨지는 60%에 근접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뭇잎을 늘리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확장 재정으로 장기화하는 내수를 살리고 고착화일로(固着化一略)로 치달는 경기침체를 살리려는 고뇌에 찬 결단인 것으로 이해한다. 무엇보다 근본적 구조 개혁으로 성장 엔진을 재점화시켜야 한다. 나뭇잎을 약 400조 원이나 늘리고도 2%대 초반의 성장률 추락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창용 총재가 서울에 특강에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 "경기 조정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장재성장률 등) 본은 못 바꾼다"리면서 구조 개혁을 추진할 정치 리더십(Leadership)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허투루 들지 말고 경제에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경제를 살릴 묘수를 찾아야만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또한 의무 지출은 올해 361조8000억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100조9000억 원(27.65%) 이상 늘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2023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2024년에도 30조8000억원이 예산보다 덜 걷히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2년째 이어지며 지난 2년간 무려 87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내수 부진에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도 크게는 40조원의 세수 공백이 예상되는 등 나라 곳간의 사정이 여의치만 않다. 나뭇잎이 빠르게 폭증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통상압박 국에 달해있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경제적·외교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있음을 각별 유념하고, 좌고우면(左顧右盼)하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진(精進)해야 하고 일로매진(一略邁進)해야 한다.

李, '자주국방' 이적행위 아닌가



아 침 헛 살

고 하 승 주필

대는 그의 탈영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정도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한미동맹을 경시하는 듯한 이 대통령의 태도다.

이 대통령은 캐북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굴종적 사고"로 규정할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동맹"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라고도 했다.

국군 장성을 '동맹'로 취급하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장군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장성급 장교가 지휘관이 되면 기본 100명 이상의 병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급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진급 난이도도 매우 높다.

그런 과정을 거쳐 벌을 단 사람들을 '동맹' 취급하는 건 사실상 군조직을 경멸하는 것으로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군 경력이란 고차 방위병 몇 개월이 전부인 안국백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뒤 4성 장군들을 무더기로 처내자 군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정복 진안에서는 병장이 탈영한 뒤 이파에서 추사했다는 보도도 부

다는 것인가.

물론 '자주국방'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한미군 없이도 자주국방이 가능한 한가.

아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이 우리 군의 상대가 못되지만 북한은 그 어떤 무기에도 막을 수 없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주변국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들이다.

지금 우리 군이 양적면 면이나 전술교리 면에서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하여 대비하고 있으나, 무기나 장비 등은 주변국들과의 경쟁에 발 맞추고 있는 것은 그래서다. 애초에 북한만 상대하려고 가정했으면 핵·공군 전력에 굳이 이렇게까지 중장항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북·중·러 3국의 동시 적대 행위를 한국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자주국방을 강화하되 한미동맹의 끈을 놓아선 안 되는 이유다.

북한 핵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런 상식을 '굴종적'이라고 표현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한미동맹상임이 뜻대로 되지 않자 마치 한미동맹이 특색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일 것이다.

한미더도 이재명 정권의 외교 무는 탓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술책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대단히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통상협상에서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 인민 만 위함에 노출될 뿐이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경솔한 '자주국방' 발언에 북·중·러 3국은 속으로 패재를 불렀을지도 모르다. 설사 대통령이라도 적(敵)을 이렇게 한 이적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국군통수권자로서 한미 한미 다에 신중해야하는 이유다.

기 고

이천시민의 품격있는 삶의 끝의 공간



조성원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장

인류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타인의 죽음'을 공동체가 함께 애도와 조례를 치르기 시작했을 때 가 중요한 전환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례는 단순한 이별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인의 삶을 되새기고, 그 발자취를 감사하는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유가족은 물론 조문객과 문상객 모두가 고인의 존재를 기억하며, 그가 남긴 흔적을 마음에 새깁니다.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과 존경의 감정을 나누며,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공동사회로서의 장례는 더욱 깊은 의미는 물론, 책임을 집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존중하고 그 삶을 끝까지 기리며,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한 문화적 노력과 함께 사회적 기반 마련에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화장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시립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천시 역시 이러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설 화장시설 건립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있으나, 사설 시설은 이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상,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천시는 호법면 단천리 산 55-1 일원을 시립 화장시설 건립 부지로 선정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반 시설 하나를 짓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공공복지의 핵심 인프라를 마련하는 중대한 과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립 화장시설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인 만큼 이천시 시민을 온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할

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의견도 있으나, 사설 시설은 이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상,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천시는 호법면 단천리 산 55-1 일원을 시립 화장시설 건립 부지로 선정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반 시설 하나를 짓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공공복지의 핵심 인프라를 마련하는 중대한 과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립 화장시설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인 만큼 이천시 시민을 온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화장시설은 여전히 막연한 거부감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화장은 국민 대다수가 선택하는 장례 방식이 되었고, 화장시설은 더 이상 낡은 재가 아닌,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한 삶의 일부입니다.

이천시가 추진 중인 시립 화장시설 건립 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복지의 실현입니다.

시민의 삶의 시작과 끝을 함께 책임지는 도시,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공공의 품격을 지키는 이천시의 선택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지지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품격 있는 삶의 끝을 품는 도시, 그 따뜻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일보 siminilbo 지방자치를 이끄는 시민의 힘

독자대표 (02)3676-2114	기획신청 (02)296-0217
편집국 대표 (02)3676-2114	FAX (02)762-8223
정기·행정부 (02)765-8115	경제·문화부 (02)296-0392
사회·수도권부 (02)296-0314	편집부 (02)296-0242
충무부 (02)296-0217	영양부 (02)296-0164
광고문의 (02)296-0164	윤천부 (03)2675-7956

발행·편집인 조순상 편집국장 이명환 인쇄인 정용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994년 9월 25일 창간 · 2012년 6월 1일 재창간

2001년 10월 9일 등록번호 서울, 7100228호 (1994)

www.siminilbo.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여의도동, 국영VP빌딩 6층) 구독료: 연간 180,000원 / 월정 15,000원 / 1부 800원

공모로운 한가위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